

일방적으로 손해 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가맹점주에게 부과하거나 과도한 대출금 반환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과한 약관은 불공정

-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불공정 약관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씨제이푸드빌 가맹 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 대출 업무 위탁 계약서를 심사하여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불공정 약관 시정 내용>

○ (CJ푸드빌) 일방적으로 손해 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함.

○ (롯데오토리스) 과도한 대출금 반환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과한 조항을 고의 · 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에 부담하도록 수정함.

■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및 할부금융업자와 금융중개인이 체결하는 약관의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하여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시정 배경

-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가맹점, 대리점 등)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된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자영업자들의 민원이 발생했다.

- 1 -

- 공정위는 씨제이 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가 각각 가맹점과 금융중개인과 체결한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시정하도록 했다.
- 씨제이 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는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2

시정 내용

1. 일방적으로 손해 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조항 (CJ푸드빌)

- (시정 전)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 (불공정 사유)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곤란할 것을 대비하여 손해 배상액을 미리 정하게 된다.(민법 398조 제1항)
- 해당 약관 조항은 가맹점주의 부당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액 예정 조항이 없다.
-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 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없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부당 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함을 의미한다.
- 따라서 가맹본부가 손해 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수월하게 손해 배상을 받게 되고, 가맹점주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므로 무효이다.
- (시정 후) 손해 배상액 예정 조항을 삭제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 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 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 2 -

수정 전 약관 조항	수정 후 약관 조항
(손해배상액 예정) 가맹점주가 제19조 제7항(부당이득의 취득금지)을 위반할 경우 가맹점주는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액에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삭제

2. 과도한 대출금 반환 책임을 금융 중개인에게 부과한 조항롯데 오토리스

- **(시정 전)** 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금융중개인의 귀책 여부와 관계 없이 대출 원리금 및 기타 비용의 반환 책임을 부과하고, 지연 이자 연 29%를 부과했다.
- **(불공정 사유)** 대출 계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손해를 유발한 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해당 약관 조항은 대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금융중개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연 이자율도 ‘이자제한법’ 등에 따른 최고 이자율(24%)을 초과하고 있다.
 -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떠넘기는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제2호)
- **(시정 후)** 금융중개인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대출금 반환 책임을 부담토록 했으며, 지연 이자율도 연 18%로 변경했다.

수정 전 약관 조항	수정 후 약관 조항
‘금융중개인’이 알선한 대출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중개인’은 ‘사업자’의 청구 즉시 해당 대출신청인에 대한 대출원리금, 지연이자, 기타 발생비용을 ‘사업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행 지체시에는 ‘사업자’의 반환청구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반환청구금액에 대하여 연 29%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금융중개인’이 알선한 대출이 ‘ 금융중개인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중개인’은 ‘사업자’의 청구 즉시 해당 대출신청인에 대한 대출원리금, 지연이자, 기타 발생비용을 ‘사업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행 지체시에는 ‘사업자’의 반환청구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반환청구금액에 대하여 연 18%의 지연이자 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3 -

1. ‘대출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본인확인, 자필서명, 인감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대출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대출채무,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인된 경우	1. ‘대출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본인확인, 자필서명, 인감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대출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대출채무,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인된 경우
2. ‘대출신청인’이 현금용통을 목적으로 물품(차량)을 구입하여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할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여 대출을 알선한 경우	2. ‘대출신청인’이 현금용통을 목적으로 물품(차량)을 구입하여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할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여 대출을 알선한 경우
3. 물품판매 없이 또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대출신청을 하거나 물품판매 후 목적물을 회수하는 등 허위로 대출 신청을 한 경우	3. 물품판매 없이 또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대출신청을 하거나 물품판매 후 목적물을 회수하는 등 허위로 대출 신청을 한 경우
4. 동일한 물품을 대상으로 당사 또는 타 금융기관에 각각 분할하거나 중복하여 대출을 알선한 경우	4. 동일한 물품을 대상으로 당사 또는 타 금융기관에 각각 분할하거나 중복하여 대출을 알선한 경우
5.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알선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되어 대출이 신청된 경우	5.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알선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되어 대출이 신청된 경우
: : :	: : :

3. 기대 효과·계획

- 대기업 계열 가맹본부와 할부금융사가 불공정 약관을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가맹점주 및 금융중개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자영업자와 체결하는 약관을 점검·시정하여 갑과 을 간 상생 협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